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조직생태학과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

임 선 미*

박 나 라**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민간 문화예술 단체의 성장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의 관점에서 한국 예술 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별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음이항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설립된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은 신규 진입하는 조직의 정당성을 제고하여 해당 조직군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현재 그러한 정당화 단계를 넘어 서로 경쟁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가 문화기반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규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규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방정부, 비영리조직, 조직생태학, 제도주의 조직론

I. 서론

개방 체계(open systems) 관점에서 조직은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동적인 존재이다(장용석 외, 2024). 개방 체계 하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정부의 규제 강화와 같이 민간 조직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조직의 생존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준, 2004). 이러한 맥락은 조직생태학(organizational ecology)에서 조직군(population)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적소(niche)의 개념으로 연결된다(Hannan & Carroll, 1992: 28). 한편,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관점에서도 정부의 특정 산업군의 활성화에 대한 지지는 해당 산업군의 인지적 정당성(cognitive legitimacy)과 규제적 정당성(regulative legitimacy)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Kuilman & Li, 2009; Rowan, 2010).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의 산업 성숙도를 진단하

* 제1저자

** 교신저자

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제도주의 조직론의 논의와 연결하여, 지방정부의 조례·규칙 및 문화기반시설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예술계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한 DiMaggio(1983)의 논의와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증명한 후속 연구들(Bell & Oakley, 2014; Carnwath & Brown, 2014)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제정) 이후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도화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자율·참여·분권’ 기조(원도연, 2008)는 지역 문화생태계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오승은·노승용, 2014; 최유진, 2011), 이후 조례·규칙 제정과 문화재단 설립 등이 확산되었다(정다해·장용석, 2023; 한국개발연구원, 2018). 또한 지방정부에서 문화예술정책은 지자체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최유진, 2011; 황은정, 2025). 이에 일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중앙정부보다 상회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정보람, 2020). 하지만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민간 문화예술 조직군 성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사회과학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의 수요·공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데서 기인하지만, 실증적 근거 없이 당위론만 반복되는 상황은 문화예술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김정수, 2016).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방정부 제도적 지지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문화예술 조직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로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상 등록된 문화예술 조직을 분석한다. 해당 제도는 2000년부터 지방정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민간 문화예술 조직을 지정하고 지원·육성하는 정책이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특히 본 제도가 도입된 2001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16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669개로 급증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폭발적 성장 속에서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및 문화기반시설 설립과 같은 제도적 지지가 조직군 성장의 토대인 적소 확장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 기재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균형패널(balanced panel) 자료를 구축하고, 음이항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방법을 적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생태계에 대한 고찰은 현재 민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산업적 생태계 내 위치를 진단하고, 정부가 바람직한 문화예술 조직 생태계 설계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I. 이론과 가설

1. 개방 체계 하 조직군 성장

1) 조직군 성장의 내부적 요인: 조직생태학의 밀도의존이론을 중심으로

조직생태학은 자연선택이론을 조직에 적용해, 조직 간 경쟁 속에서 생존한 형태가 보존됨으로써 조직군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김용학·염유식, 1991: 116). 이때 핵심적인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 조직이 존재하는가’이며(Hannan & Freeman, 1977: 936), 연구의 초점은 조직군의 생성과 쇠퇴 과정에 맞춰져 있다(Abbott et al., 2016). 조직생태학의 핵심 이론인 밀도의존이론(density dependence theory)은 조직군 내 조직 수(밀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정당성과 경쟁의 효과를 설명한다(Abbott et al., 2016: 259; 한준, 2000: 2004). 조직군 초기에 유사 조직의 존재는 신규 조직이 구성적 정당성(constitutive legitimation)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고(Barnett & Sorenson, 2002; Rao, 2002), 이는 해당 조직의 생존률 향상으로 이어진다(Carroll & Hannan, 2000).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시계열적 자기 상관(serial autocorrelation)은 조직군 성장의 기초가 된다(Delacroix & Carroll, 1983). 그러나 밀도가 조직군 내 임계점을 초과하면 조직 간 경쟁 강도가 증가해 신규 조직 진입이 억제되고 조직의 실패율은 상승한다(Carroll & Hannan, 2000; Hannan & Freeman, 1987). 밀도의 증가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을 심화시키며, 이로 인해 조직군의 성장 곡선은 일반적으로 역U자형을 따른다(Barnett & Sorenson, 2002; Hannan & Freeman, 1987). 또한 조직군의 경쟁 강도는 자원이 분포된 적소의 폭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군 내 적소가 넓을수록 경쟁이 완화되고, 좁을수록 경쟁이 심화되어 변화에 적응한 조직만 생존하게 된다(Carroll & Hannan, 2000; Hannan & Carroll, 1992).

조직생태학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민간 영리 조직에 집중되어 왔다. Hannan & Freeman (1987; 1988)은 미국 노동조합을, Dobbin(1994)은 철도 회사를, Barnett & Carroll(1987)은 전화 회사를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해외투자 자회사(김익수·한병섭, 2005), 한국 영화사(김선혁·신동엽, 2009)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영리 조직군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PTROs(Private Trans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s: Abbott et al., 2016), 사회적기업(이은선, 2015; 장현주, 2013), 사회적협동조합(한신갑, 2016)을 대상으로 한 조직생태학적 분석이 점차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 조직군 성장의 제도적 요인: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조직생태학이 조직군 전체의 역학에 주목한다면, 제도주의 조직론은 제도가 조직의 구조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Lander & Heugens, 2017; Wooten & Hoffman, 2008). 제도주의는 ‘무엇이 조직들을 유사하게 만드는가?’(DiMaggio & Powell, 1983: 147)라는 동형화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소위 ‘자명시되는 정당성(taken-for-granted legitimacy)’을 통해 사회 질서의 재생산을 설명하고자 한다(Thornton & Ocasio, 2008; Zucker, 1977). 제도주의 조직론이 조직 범주의 형성과 동형적 확산에, 조직생태학이 조직군의 밀도와 변화에 각각 초점을 두지만, 두 이론은 모두 개방 체계 속 정당성 개념을 공유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Carroll & Hannan, 1989; Hannan & Carroll, 1992; Haveman & David, 2008; Heugens & Lander, 2009; Lander & Heugens, 2017; Ruef, 2000). 지방정부의 제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종합하면, 적소 확장을 매개로 조직군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적소는 조직의 생성과 사멸에 결정적이며, 정당화와 경쟁의 역사 또한 환경의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Carroll & Hannan, 2000; Hannan & Carroll, 1992). 특히, 정부 제도 변화가 조직군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실증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Colyvas, 2007; Mezas & Boyle, 2005; 정진원,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직군 성장을 조직생태학 관점에서 분석하면서도, 제도적 요인을 통합해 현실적 설명력과 이론적 적합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한다(Greenwood et al., 2011; 2014; Rowan, 2010). 즉,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의 밀도의존이론에 기반해 제도주의 조직론이 제안한 사회정치적 정당성(socio-political legitimacy)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Aldrich & Fiol, 1994).

2. 정부의 문화예술지원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1) 예술계와 정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Becker(1982)는 예술 작품의 창작이 개인 예술가의 창의성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집단적 협업, 연결망, 관행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말하는 사회 체계(social worlds)를 예술계에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한준 외, 2011). 이와 달리, Bourdieu(1983)는 예술의 장(field)을 사회 구조 내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갈등의 공간으로 이해하며, 보다 거시적인 분석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Becker와 Bourdieu는 각각 미시적 관계망과 거시적 권력 구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한준 외, 2011). 본 연구는 정부의 구조적 역할을 Bourdieu의 시각에서 조망하면서도, 문화예술 조직군의 성장과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 형성은 Becker의 관점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Becker(1982)는 <표 1>과 같이 정부의 예술계 개입을 간접/직접, 활성화/제약의 두 축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첫째, ‘소유권 강화’는 예술가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계를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지원’은 정부가 예산이나 인프라 등을 통해 예술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제약 전략으로는, 셋째 ‘질서 유지’ 명목의 간접적 규제와 넷째 ‘검열’과 같은 직접적 통제가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정부의 개입 방식이 예술계 형성과 운영에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표 1〉 Becker(1982)의 문화예술정책에서의 국가 역할 유형

국가의 역할	간접적	직접적
활성화	소유권(property)	지원(support)
제약	질서유지(nuisance)	검열(censorship)

Becker(1982)의 정부 유형화는 자유주의·다원주의적 미국 사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기에, 다른 제도적 맥락을 지닌 국가들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Hillman-Chartrand & McCaughey(1989)는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자금 지원, 정책 목표, 예술 기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자유주의, 다원주의, 조합주의, 국가주의를 포괄하는 보다 유연한 유형화를 〈표 2〉와 같이 제시한다. 이들에 따르면, ‘촉진자(facilitator)’ 국가는 자유주의적 배경에서 민간 후원을 장려하며,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예술 후원을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후원자(patron)’ 국가는 다원주의적 특징을 바탕으로, 정부 대신 준독립적 예술기구를 통해 예술을 지원한다. ‘건축가(architect)’ 국가는 조합주의에 기반하여 문화부 등 전담 부처가 예술 정책을 직접 수립·집행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사(engineer)’ 국가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바탕으로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만을 장려하고, 그 외 예술은 검열하거나 제약한다. 이는 예술의 장에 정치 권력이 강하게 개입하는 경우로, Bourdieu(1983)의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다(한준, 2024).

〈표 2〉 Hillman-Chartrand & McCaughey(1989)의 문화예술정책에서의 국가 역할 유형

국가의 역할	촉진자	후원자	건축가	기관사
자금 지원	면세	준독립 위원회	정부 전담 부처	국가 독점
정책 목표	다양성	수월성	사회적 복지	정치 선전, 교육
예술적 기준	무작위적	전문가적	공동체적	정치적
대표 국가	미국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나치 독일

오늘날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여러 국가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특정 유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예술 공모 사업은 예술의 탁월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Hillman-Chartrand & McCaughey(1989)의 유형화에 따르면 ‘후원자’ 유형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민간 문화예술 단체를 전문 단체로 지정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촉진자’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의 후원자가 다양하게 등장한 현대의 예술계의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의 성격을 단일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예술 지원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후원자를 인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업(natural division of labor)을 통해서 문화예술정책의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DiMaggio(1983)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가치(및 그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를 식별하고, 가능한 경우 그 가치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재단과 기업을 독려하며, 평소의 후원 기

능 외에도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DiMaggio, 1983: 70).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현황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문화예술 조직을 지정하고 지원·육성하는 제도이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지정된 단체는 공익법인 지위를 획득해 기부금 공개 모집이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개인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가, 법인기부자에게는 손금산입 혜택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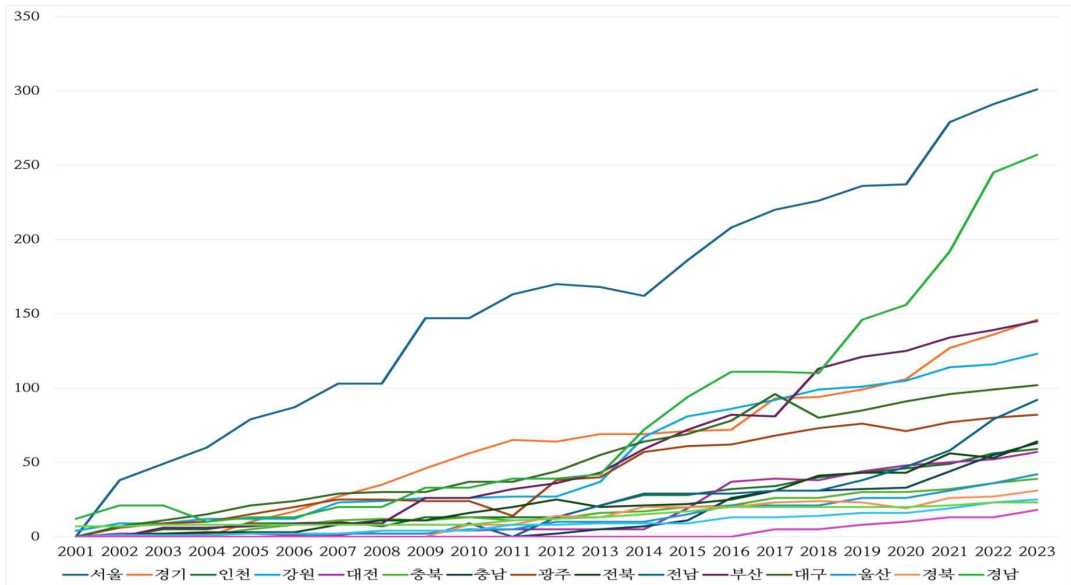
〈표 3〉 광역시·도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운영 현황

지역	최초 지정 일자	지정 횟수	공고 시기	지정 시기
서울특별시	2001.12.31	1년 1회	10월	11월
경기도	2005.01.01	1년 1회	10월	1월
인천광역시	2003.11.01	1년 1회	9~10월	12월
강원특별자치도	2002.08.09	1년 1회	10월	12월
대전광역시	2002.06.25	1년 1회	9월	10월
충청북도	2004.02.20	1년 1회	11~12월	1월
충청남도	2011.10.04	1년 1회	12월	2월
광주광역시	2001.12.18	1년 1회	10월	12월
전북특별자치도	2002.12.01	1년 1회	9~10월	11월
전라남도	2010.02.22	1년 1회	2월	4월
부산광역시	2003.04.01	1년 1회	7월	11월
대구광역시	2002.03.30	1년 1회	5월	7월
울산광역시	2008.01.01	1년 1회	1~2월	3월
경상북도	2010.01.18	연중 수시	-	-
경상남도	2001.12.31	1년 1회	8~9월	12월
제주특별자치도	2002.02.09	1년 1회	9월	11월
세종특별자치시	2016.11.15	1년 1회	11월	12월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2023)에 기반하여 재구성함

이 제도는 광역시·도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지정, 심사,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운영 방식과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공고 및 지정 시기, 지정·취소 기준 등이 광역자치단체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지역별 운영 차이는 〈표 3〉에 정리된 연혁 및 운영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1〉은 광역시·도별 지정 현황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그림 1〉 광역시·도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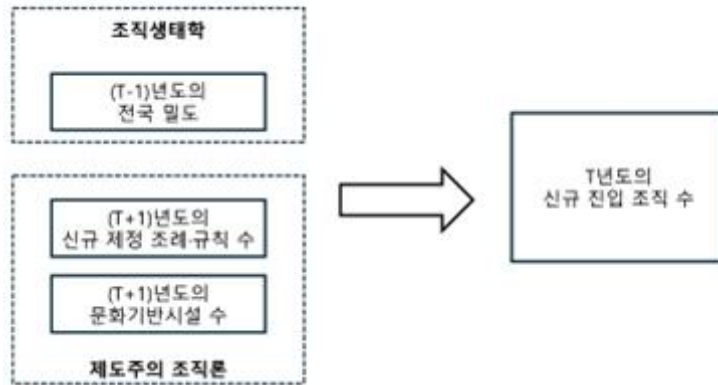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청구(2001년~2006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2007년~2023년)를 기반으로 저자가 작성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시행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그 가운데 김재중·허식(2019), 이슬기(2020)의 연구는 예외적 사례로서, 모두 정부 지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조직군 성장이라는 거시적 조직 맥락을 충분히 조명하지는 못했다. 조직 진입의 통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역할을 재정 지원에 국한하였고, 설문조사 기반의 연성 자료(soft data)에 의존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의 관점에서 조직군의 성장 과정을 분석하고,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 효과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가설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의 성장 요인을 규명하고, 제도주의 조직론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2〉에 제시된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의 분석 틀



조직생태학의 밀도의존이론에 따르면 유사 조직의 밀도 증가는 신규 조직 창립과 제도 진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Carroll & Khessina(2019: 532)는 조직 형태가 대중과 문지기(gate keeper)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보았으며, Kuilman & Li(2009)와 황정윤·조희진(2016)은 동일 인지 범주에 속한다고 인식되면 정당성이 유사 조직에도 확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할수록 기존 문화예술 조직이 해당 제도에 진입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 조직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부여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조직을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제도화하는 정책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하에서 사회적 기업에 제공되는 제도적 환경과 유사하며(Nyssens, 2006), 장현주(2013)와 이은선(2015)의 연구처럼,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행정 부담이 있더라도 세제 혜택을 위해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순응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조직생태학 차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전국적 밀도가 증가할수록, 국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결합하여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Baum & Oliver(1992)는 법적 지원과 제도적 수용성이 높은 환경에서 새로운 조직 설립이 촉진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정부의 제도적 지지가 적소에 영향을 준다는 조직생태학의 논의(Carroll & Hannan, 2000)와 연결된다. 이는 조직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제도주의 관점(Heugens & Lander, 2009; Lander & Heugens, 2017)에서도 해석 가능하며, 정부 정책이 산업의 내부 역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다(Greenwood et al., 2011; Hannan & Carroll, 1992; Haveman & David, 2008; Rowan, 2010; Ruef,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를 조례·규칙과 문화기반시설의 두 가지 차원으로 조작화하였다. 제도주의 관점에서 조례·규칙은 해당 산업군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인지적 정당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Meyer & Rowan, 1977; Wooten & Hoffman, 2008), 규제적 정당성 역시 강화된다(Kuilman & Li,

2009; Rowan, 2010). 결과적으로 조직군 내 적소가 확장되고 자원 경쟁이 완화되어(Carroll & Hannan, 2000), 문화예술 조직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Hannan & Carroll, 1992; Lander & Heugens, 2017).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기능한다. 한국의 문화예술 행정은 팔길이 원칙에 따라 준정부조직(QUANGOs: 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화예술 조직을 시민과 정책결정자에게 더 수용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나보리·성연주, 2022). 특히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은 조례 확산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정다해·장용석, 2023), 이러한 기반시설이 많을수록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제도주의 조직론 차원):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제도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신규 민간 문화예술 조직의 진입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1: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지원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수록,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지방정부가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설립할수록,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지만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생태학의 밀도의존이론 논리에 따라 전국 밀도의 값과 그 제곱항의 값을 포함하여 양자 간 관계가 역U자(∩)형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논의했듯, 밀도의 증가에 따라 정당성은 강화되지만 경쟁 또한 심화되어 신규 조직 진입이 감소한다는 밀도의존이론의 핵심 논리와 관련된다(Abbott et al., 2016; Barnett & Carroll, 1987; Hannan & Freeman, 1977; 1987; 1988; 김선혁·신동엽, 2009; 김익수·한병섭, 2005; 이은선, 2015; 장현주, 2013; 한신갑, 2016).

III. 연구 설계

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현황과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세종시·제주도 제외)의 조직군을 대상으로 2001~2021년 균형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주요 자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를 활용하되,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내의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정보와 교차 비교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신규 진입 수'로서 0 이상의 정수 값을 가지는 가산 자료(count data)이므로, 과대산포 여부를 검토한 뒤 음이항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 포아송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이 '분산=평균'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자료에서는 분산이 평균보다 큰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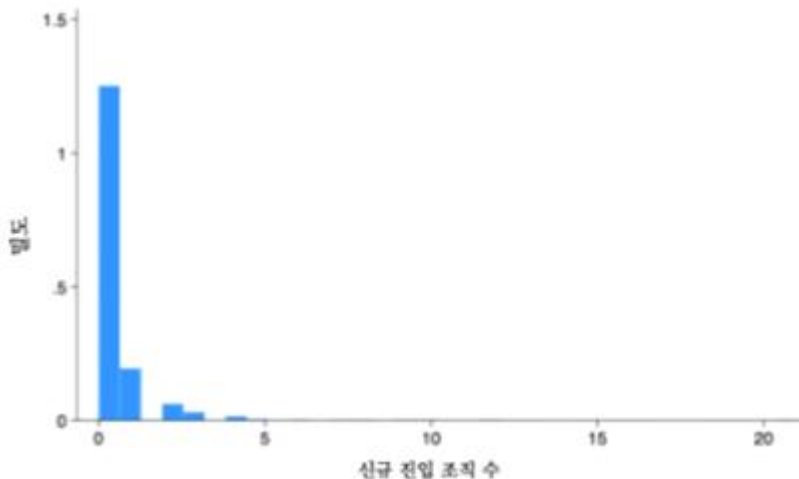
일반적이므로(Long & Freese, 2006),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음이항회귀모형이 보다 적합할 때가 많다(Winkelmann, 2003). 또한 본 연구는 패널 자료의 개체별·시점별 특성을 모두 통제하기 위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하였다(Wooldridge, 2010).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0.01 유의수준에서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분석은 Stata 18.0의 xtnbreg 명령어와 i.year, fe 옵션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2.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신규 진입'은 특정 연도(t)에 지자체 조직군에 새롭게 진입한 조직의 수를 의미한다. 종속변수의 평균은 0.3149, 분산은 0.9573으로 나타나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대산포 현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자료는 포아송회귀모형보다는 음이항회귀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종속변수인 신규 진입 조직 수의 왜도(skewness)는 6.2271, 첨도(kurtosis)는 70.5043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여, 자료 분포에 극단치가 다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자체에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밀집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신규 진입 조직 수



2) 독립변수

(1) 전국 밀도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 중 하나인 조직생태학에서 사용되는 조직군 성장의 내재적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밀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밀도는 't-1년도의 전국 전문예술법인·단체 수'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조직의 존재가 해당 조직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이후 조직의 설립과 제도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조직생태학의 기본 전제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자료를 통해서 전국 밀도를 계산하였다.¹⁾

한편 본 연구는 밀도의 비선형 관계를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적용하면서도 현재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조직군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 밀도'의 제곱항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밀도와 밀도 제곱값 간의 역U자형 관계를 검토하고, 조직군이 정당화 단계에 있는지 또는 경쟁 단계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나아가 조직군 성장의 임계점을 추정하고자 한다.

(2)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 조례 및 규칙 제정과 문화기반 시설 설립·운영

다음으로 제도주의 조직론의 시각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문화예술 지원 관련 조례·규칙의 수와 지방정부가 지원·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의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변수 모두 제정·설립 직후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홍보, 집행, 활용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신규 조직의 진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두 변수 모두 실제 제도적 환경이 영향을 받는 시점과 행정 자료의 집계·공표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의 신규 진입 직전 시점의 제도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말 또는 다음 해 초에 확정·공표되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엄영호(2020)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t시점의 제도적 상태를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하되, 행정상 연도 표기가 t+1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조례 및 규칙 제정과 문화기반시설 운영 변수는 행정상 통계가 t+1 시점에 확정·공표되지만, 실제로는 해당 연도(t) 동안 존재한 제도 환경을 반영한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값은 사후 공표된 자료일 뿐, 미래 정보(look-ahead bias)를 활용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2015년에 제정된 조례는 2016년에 공표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2015년의 제도적 맥락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지연(lag) 처리 방식은 t년도 시점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의 제도 반영 시차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서 조례를 주목하는 이유는 제도주의 조직론의 논리 하에서 제도가 행위자의 행동과 선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즉 조례와 규칙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규칙과 가치의 규범적 구조를 형성하고 동시에 지방정부 내 행위자들의 인지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기

1)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는 2007년부터 발간되었으며, 2001년~2006년의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였다. 또한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내의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정보와 교차 비교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한다(Meyer & Rowan, 1977). 이를 본 연구의 맥락에 대입하면, 문화예술 지원 관련 조례 및 규칙은 지자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필요성을 제고하며, 지방정부 내의 행위자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226개의 지자체에 대하여 제목에 ‘문화’, ‘예술’, ‘예술인’이 포함된 조례와 규칙을 추출함으로써, 문화예술 산업의 내재적 가치 옹호를 위한 조례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조례·규칙을 수집하였다.²⁾

마찬가지로,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에서 지자체 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지방정부 제도적 지지의 또 다른 지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수를 기초 지자체 내의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재단, 문화의 집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로서 문화기반시설을 주목한 이유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내 문화예술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소멸의 대안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나보리·성연주,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는 제도적인 지지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토대로 지자체 지원 문화기반시설을 확인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문화생산GRDP, 비수도권 여부, 광역 단위 전문예술법인·단체 밀도를 포함하였다. 먼저 문화생산GRDP를 통제변수로 고려한 이유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산업 규모 및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지자체GRDP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전문예술법인·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로그 변환을 적용하여 자료 범위를 축소하고 비선형적 관계를 선형화하였다.

한편 KOSIS에서는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GRDP에 대해 본 연구의 분석 기간(2001년~2021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한 추가 자료 확보에도 제약이 존재하였다.³⁾ 이에 따라 결측치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 대체(multiple imputation)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King et al.(2001)과 Honaker & King(2010)이 제시한 R의 Amelia II 패키지를 사용하였다(김두환·김지혜, 2011). 이는 관측된 보조 변수를 포함한 대체 모형을 활용하

2) ‘문화’라는 단어가 있지만 문화예술 범주에 속하는 문화가 아니라 행동·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의미하는 조례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료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성북구의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조례들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 생산 자료를 1985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료는 지역별로 제공 시작 연도가 상이한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북은 2005년부터, 전남은 2006년부터, 서울은 2010년부터 제공된다.

는 경우 통계적인 성능이 더욱 향상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에 따른 것이다(Howard et al., 2015; 고길곤·탁현우, 2016). Amelia II를 활용하여 결측치를 보간·대체한 단일 데이터셋의 자료로 분석한 후, 결측치를 보간·대체하지 않은 실제 관측치만 활용한 강건성 검증을 병행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문화예술 단체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여부를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동시에 광역 단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밀도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변수 설정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종속 변수	신규 진입	t년도에 신규 진입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전국 밀도	t-1년도의 전국 전문예술법인·단체 수 (t-1년도의 전국 전문예술법인·단체 수) ²	
독립 변수	조례 및 규칙	t+1년도 문화예술 지원 관련 조례·규칙 신규 제정 빈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문화기반시설	t+1년도 문예회관 수+ 문화재단 수 + 문화원 수 + 문화의 집 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통제 변수	문화생산 GRDP	Log(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GRDP)	국가통계포털
	비수도권	비수도권 = 1 서울, 인천, 경기 = 0	.
	광역 단위 예술법인·단체 밀도	t-1년도의 같은 광역시 내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수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I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5>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신규 진입’과 ‘전국 밀도’의 기술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는 본 연구의 분석 기간(2001~2021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조례·규칙과 문화기반시설의 기술통계를 통해, 지자체별 제도적 지원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 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신규 진입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와 전국 밀도, 조례·규칙, 문화기반시설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에서 기대한 방향성과 일치하였다. 아울러 모든 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가 0.8 이하로 나타났으며, VIF 값의 최댓값은 2.89, 평균은 1.77로 보고되어,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표 5〉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변수	N	Mean	S.D	Min	Max	(1)	(2)	(3)	(4)	(5)	(6)	(7)
신규 진입	4,520	0.315	0.957	0	189	1.000						
전국 밀도	4,746	564.667	330.388	16	1183	0.092*	1.000					
조례 및 규칙	4,746	4.339	1.965	1	9	0.029*	0.656***	1.000				
문화기반시설	4,746	1.996	0.803	0	4	0.116*	0.397**	0.302***	1.000			
문화생산 GRDP	4,746	11.421	1.216	7.787	14.461	0.009**	0.563**	0.357**	0.255***	1.000		
비수도권	4,746	0.761	0.427	0	1	-0.047*	-0.001*	-0.009**	-0.016*	-0.017**	1.000	
광역밀도	4,746	31.460	49.875	0	279	0.176**	0.560***	0.038*	0.269**	0.274***	-0.412***	1.000

주: *p < .05, **p < .01, ***p < .001, 소수점이 있을 경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음이향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이원고정효과 음이향회귀분석에 위계적회귀분석 접근을 결합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규 진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6〉과 같이, [모형 1]은 전국 밀도의 영향을, [모형 2]는 전국 밀도와 조례·규칙 제정을, [모형 3]은 여기에 문화기반시설 변수까지 포함하였다. 세 모형 모두 Wald χ^2 값이 유의하고, Log likelihood가 증가하여 모형 적합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전국 밀도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규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설1에 대한 지지로, 밀도의존이론이 한국의 문화예술 조직 생태계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의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전국 밀도와 그 제공항 간의 \cap 자형 관계가 나타나, 조직군이 정당화 단계를 넘어 경쟁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 3]에서 도출된 임계값은 약 1,391.7개이다. 이 수치는 전국 밀도 항($\beta_1 = 0.0050013$)과 전국 밀도 제공항($\beta_2 = -1.796E-06$)의 계수를 이용하여, $-\beta_1 / 2\beta_2$ 계산식으로부터 산출된 것이다. 임계점에 도달한 2021년을 기준으로 현재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Rowan, 2010; Wholey & Brittain, 1986). 2021년 이후 전국에 1,391개 이상의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있다는 것이 문화예술 조직의 정당성 확보의 기준점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시장의 과포화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조직군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Rowan, 2010), 본 연구 결과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이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모형 2]와 [모형 3]에서 조례·규칙 제정은 신규 진입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가설 2-1을 지지하였다. 조례·규칙 계수(0.024)는 지수 변환 시, 조례가 1건 증가할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약 2.4% 증가함을 의미하며(Long & Freese, 2006), 이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적소를 창출함을 보여준다(Aldrich & Fiol, 1994; Colyvas, 2007; Mezas & Boyle,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장현주(2013)와 이은선(2015)의 연구 맥락과 같이 민간조직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승인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민간 문화예술 조직이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문화기반시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문화기반시설의 존재 자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의 성장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기반시설 그 자체가 지역 문화 발전을 견인하기보다는, 해당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Hesmondhalgh et al.(2015)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내 연구들도 지방 문화기반시설의 정체성 부족과 프로그램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송은아·임준묵, 2018; 정영재·이광훈,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 문화기반시설 존재만으로는 구조적·제도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2001~2021년 음이항회귀분석 결과

신규 진입	모형 1			모형 2			모형 3		
	Coef.	S.E.	P> z	Coef.	S.E.	P> z	Coef.	S.E.	P> z
전국 밀도	0.005**	0.002	0.009	0.005**	0.002	0.007	0.005**	0.002	0.006
전국 밀도 ²	-0.000	0.000	0.061	-0.000*	0.000	0.046	-0.000*	0.000	0.041
조례 및 규칙				0.022*	0.009	0.014	0.024*	0.010	0.021
문화기반시설							0.076	0.058	0.190
문화생산 GRDP	0.110**	0.039	0.005	0.146*	0.057	0.011	0.108**	0.040	0.007
비수도권	0.226	0.332	0.496	-0.276	0.339	0.415	-0.277	0.337	0.411
광역밀도	0.025	0.017	0.143	-0.010	0.007	0.155	-0.010	0.007	0.156
cons	-2.401***	0.240	0.000	-2.329**	0.785	0.003	-2.460***	0.246	0.000
Log likelihood	-1914.846			-1908.4299			-1907.9517		
Wald chi ²	134.88			148.95			149.86		
Prob > chi ²	0.000			0.000			0.000		
N	4,520			4,520			4,520		

주: *p < .05, **p < .01, ***p < .001, 계수 및 표준 오차 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표 7〉은 〈표 6〉의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으로, Amelia II를 이용해 보간한 자료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제 관측치를 활용해 재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추가 분석은 결측치 대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값의 불확실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관측 자료에 기반한 결과와 비교하며 분석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표 7〉의 세 모형은 〈표 6〉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조직생태학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초기 연도를 제외하면(left censoring) 이후 시점의 결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7〉 2010~2021년 음이항회귀분석 결과

신규 진입	모형 4			모형 5			모형 6		
	Coef.	S.E.	P> z	Coef.	S.E.	P> z	Coef.	S.E.	P> z
전국 밀도	0.013**	0.005	0.006	0.012**	0.005	0.007	0.013**	0.005	0.006
전국 밀도 ²	-0.000*	0.000	0.011	-0.000*	0.000	0.013	-0.000*	0.000	0.011
조례 및 규칙				0.080*	0.033	0.015	0.023*	0.010	0.021
문화기반시설							0.030	0.057	0.602
문화생산 GRDP	0.140	0.125	0.263	0.146	0.125	0.242	0.136	0.126	0.283
비수도권	-0.246	0.332	0.459	-0.276	0.338	0.415	-0.277	0.337	0.410
광역밀도	-0.011	0.007	0.143	-0.010	0.007	0.155	-0.010	0.007	0.156
cons	-6.371**	2.121	0.003	-6.389**	2.127	0.003	-6.482**	2.130	0.002
Log likelihood	-1121.1318			-1120.1598			-1120.024		
Wald chi ²	51.71			53.76			54.08		
Prob > chi ²	0.000			0.000			0.000		
N	2,712			2,712			2,712		

주: *p < .05, **p < .01, ***p < .001, 계수 및 표준 오차 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V. 결론

본 연구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의 성장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직생태학과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민간 문화예술 조직군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은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산업 생태계상 위치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문화예술 조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iMaggio(1983)가 지적했듯, '어떤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은 문화예술 정책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본 연구는 민간 조직군의 내적 성장과 지방정부의 제도적 역할을 검토하는 '현장에 대한 고찰(field think)'을 시도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설립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가 이후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정당성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국 밀도와 그 제곱항 간의 역U자형 관계(∩)가 확인되어, 한국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이 정당화 단계를 넘어 경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지방정부의 조례 및 규칙 제정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지방정부가 보유한 문화기반시설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규 진입에 통계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민간 문화예술 조직군의 현 단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조직생태학이 주로 조직군 내부 요인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 반면,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제도적 맥락을 결합하여 보다 다차원적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론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Amelia II 패키지를 활용해 결측치를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자료 처리의 한계가 존재한다. 결측치 대체 방법 가운데 종단 연구에서 권장되는 다중 대체 방법을 사용하였으나(Graham, 2009; Graham & Schafer, 1999; Honaker & King, 2010; Howard et al., 2015; King et al., 2001; Newman, 2003; 고길곤·탁현우, 2016; 허명희, 2014), 본 연구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기간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추가 분석(표 7)을 수행하였다. 기존 문헌들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나, 대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정값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방법론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변수 구성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 문화기반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실태 자료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문화기반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예산 투입 내역 등 다층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례 제정 여부'와 '문화기반시설 보유 여부'는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 수준을 대표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 바 있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재정 지원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세부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의 포괄성과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변수의 내생성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문화예술 조직의 활동성과 밀도 증가는 제도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조례 제정이나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할 수 있다.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보완을 위해 다중대치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도구변수 분석과 결합할 경우 모형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이론적으로도 유효한 도구변수를 식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시간 고정효과를 투입하여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적합한 도구변수를 확보하여 인과 추정의 엄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다소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조례 및 규칙 제정과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직군 성장에 영향을 주는 내부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조직 내부적인 차원에서 조직 규모에 따른 차이가 조직 간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Baum & Haveman, 1997)와 조직군 성장에 있어서 특정 거리 이내의 밀도가 경쟁 효과만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선행연구(Sorenson & Audia, 2000) 등을 고려했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생태학에서 논의된 변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민간 문화예술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장르 및 조직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약이 있다. 특히 특정 시점 이후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혹은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민예총)'의 지역 지부들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포함되었는데, 이들이 문화예술 조직군 생태계에서 공동체 생태학의 요소로 기능하는지, 혹은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예술법인·단

체 원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조직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조직 생태계 분석은 ‘공적 자금으로 어떤 문화예술 조직을 지원(해야)할 것인가’라는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주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즉, 민간 문화예술 조직을 최대한 많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포함하는 양적 확대 전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조직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질적 심화 전략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특히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민간의 문화예술 단체에 세제 혜택을 수반하므로, 선정 기준의 명확성과 범위의 타당성이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군은 현재 경쟁 단계에 있으며, 조직 생애주기상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수(2008)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 지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문화기반시설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토론회(19.8.29)’에서도,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조직이 중앙정부 보조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하는 현실이 언급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3).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양적 확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김정수(201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층적 평가 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대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실험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지 가운데 조례 및 규칙 제정이 조직군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례 및 규칙 제정이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자원과 기회, 즉 적소를 창출하는 실질적 제도적 수단임을 의미한다. 행정학 내에서는 조례 제정을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보며, 일군의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을 지지한다(김혜정, 2017; 박나라·김정숙, 2018; 정다정·유승주, 2021). 따라서 조례 및 규칙은 지역 조직 생존과 성장에 기여하는 실천적 정책 도구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Mohr, 1969). 한편, 지방의 문화기반시설의 존재는 민간 문화예술 조직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나보리·성연주(2022) 등의 기존 연구와 상충되며, 단순한 물리적 시설의 존재보다는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조직군 성장에 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조직군이 성숙기에 도달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조직 생애주기를 고려한 차별적·단계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성과 창출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Rowan, 2010). 따라서 모든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동일하게 지원하기보다는, 생애주기 초기 단계에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조직에 집중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면 지원 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의 탄력적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유두호·엄영호, 2021). 예를 들어, 민간 시장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문화기반시설에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 수단 선택에 관한 도구주의적 관점과 공공선택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방출연재단의 출연금 지출

수준을 분석한 이태천·엄태호(2024)에 따르면 민간 문화예술 조직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문화복지 수요가 이미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문화예술 관련 출연금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유사한 생태 구조를 가진 조직군에 대한 지방정부의 고도화된 지원 경험을 문화예술 조직에도 전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길곤·탁현우. (2016). 설문자료의 결측치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 다중대체법과 재조사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4(4): 291-319.
- 김두환·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선혁·신동엽. (2009). 환경역동성과 혁신의 위험: 한국영화사들의 혁신과 조직사멸률, 1919~2004, 「경영학연구」, 38(4): 935-965.
- 김용학·염유식. (1991). 조직군 생태학 이론: 방법론 비판과 대안 제시, 「한국사회학」, 25(여름): 113-141.
- 김익수·한병섭. (2005). 조직생태학 관점에서 본 해외투자 자회사 사멸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34(2): 497-525.
- 김재중·허식. (2019).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이 민간기부에 미치는 효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3(3): 31-57.
- 김정수. (2008).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 163-191.
- 김정수. (2016). 좀비예술가와 별거벗은 임금님: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문화정책논총」, 30(1): 4-30.
- 김혜정. (2017). 정책학습과 정부역량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지방정부 자살예방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3): 237-270.
- 나보리·성연주. (2022). 지역문화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관계적 지역문화자원의 역할: 서울시 자치구 문화분권형 사업 참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정책논총」, 36(2): 5-32.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22~26)」,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나라·김정숙. (2018). 환경조례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환경기본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3): 1-38.
- 송은아·임준묵. (2018). 문화산업으로서 축제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거창국제연극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8): 55-63.
- 엄영호. (2020). 「제도적 환경 변화와 지방정부 행위자성 증대 분석: 지방정부 조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 오승은·노승용. (2014).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63-84.
- 원도연. (2008).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과제, 「경제와 사회」, 79(3): 156-183.
- 유우호·엄영호. (202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 생애주기별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2): 181-207.
- 이슬기. (2020).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4(3): 95-120.
- 이은선. (2015). 국내 사회적기업 조직군의 특성: 정책의 결과인가, 경쟁의 결과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4(4): 617-643.
- 이태천·엄태호. (2024). 지방정부의 정책 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지방출연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3(3): 205-240.
- 장용석·유승주·정술. (2024). 개방 체계(open systems)와 조직: 제도주의와 조직학습, 「한국행정학보」, 58(5): 157-192.
- 장현주. (2013). 조직생태학적 관점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탐색: 밀도의존이론의 적용, 「한국공공관리학보」, 27(4): 165-190.
- 정다정·유승주. (2021). 글로벌 규범과 지방정부의 순응: 건강도시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2): 21-49.
- 정다해·장용석. (2023). 지방정부의 지역문화재단 설립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7(4): 243-279.
- 정보람. (2020).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5(3): 63-89.
- 정영재·이광훈. (2022). 지방조직의 확산과 동형화: 지방문화원 설립 사례 분석, 「GRI 연구논총」, 24(1): 1-29.
- 정진원. (2015). 조직생태학 및 정부정책이 한국영화산업(1962-2010)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59-478.
- 최유진. (2011).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으로서의 지역문화: 시군 단위 지방정부의 패널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 163-185.
- 한국개발연구원. (2018).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 분야 보고서」,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한신갑. (2016). 협동조합의 조직생태학: 혼종성의 공간, 혼종성의 시간, 「한국사회학」, 50(2): 165-198.
- 한준. (2000). 국지적 경쟁, 경쟁의 강도와 산업의 분절화, 「한국사회학」, 34(1): 167-192.
- 한준. (2004). 시장간 연결결과와 조직의 생태학: 한국 제조업체의 역동성, 1981~1999, 「한국사회학」, 38(4): 187-214.
- 한준. (2024). 「한국 예술계: 기원·발전·쟁점」, 서울: 역사공간.
- 한준·한신갑·장유정·권도희. (2011). 한국 근대적 음악계의 형성과 분화, 「문화와 사회」, 10: 253-288.
- 허명희. (2014). 「응용데이터 분석」, 파주: 자유아카데미.

- 황은정. (2025).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을 위한 통합평가모형 개발 연구: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8(4): 345-380.
- 황정윤·조희진. (2016). 사회적 기업 설립의 영향요인 분석: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2(3): 237-277.
- Abbott, K. W., Green, J. F., & Keohane, R. O. (2016). Organizational ecology and institutional change in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70(2): 247-277.
- Aldrich, H. E., & Fiol, C. M. (1994). Fools rush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industry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4): 645-670.
- Barnett, W. P., & Carroll, G. R. (1987). Competition and mutualism among early telephone compan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2(3): 400-421.
- Barnett, W. P., & Sorenson, O. (2002). The Red Queen in organizational creation and development.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1(2): 289-325.
- Baum, J. A., & Haveman, H. A. (1997). Love thy neighbor? Differentiation and agglomeration in the Manhattan hotel industry, 1898-1990.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 304-338.
- Baum, J. A., & Oliver, C. (1992). Institutional embeddedness and the dynamics of organizational popu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4): 540-559.
- Becker, H. S. (1982). *Art worlds*.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ll, D., & Oakley, K. (2014). *Cultural policy*. London, UK: Routledge.
- Bourdieu, P. (198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or: The economic world reversed. *Poetics*, 12(4-5): 311-356.
- Carnwath, J. D., & Brown, A. S. (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Manchester, UK: Arts Council England.
- Carroll, G. R., & Hannan, M. T. (1989). Density delay in the evolution of organizational populations: A model and five empirical tes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4(3): 411-430.
- Carroll, G. R., & Hannan, M. T. (2000). Why corporate demography matters: Policy implications of organizational diversit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2(3): 148-163.
- Carroll, G. R., & Khessina, O. M. (2019). Chapter 20. Organizational, product and corporate demography. In Poston, D. L. (ed.), *Handbooks of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Handbook of population*, 521-553, Cham, Switzerland: Springer.
- Colyvas, J. A. (2007). From divergent meanings to common practices: The early 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transfer in the life sciences at Stanford University. *Research Policy*, 36(4): 456-476.
- Delacroix, J., & Carroll, G. R. (1983). Organizational foundings: An ecological study of the newspaper industries of Argentina and Ireland.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8(2): 274-291.

- DiMaggio, P. J. (1983). Can culture survive the marketplace?.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13(1): 61-87.
- DiMaggio, P. J.,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Dobbin, F. (1994). Cultural models of organizati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ational organizing principles. In Crane, D. (ed.), *The sociology of culture: Emerging theoretical perspectives*, 118-140. Cambridge, MA: Wiley-Blackwell.
- Graham, J. W. (2009). Missing data analysis: Making it work in the real worl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 549-576.
- Graham, J. W., & Schafer, J. L. (1999). On the performance of multiple imputation for multivariate data with small sample size. In Hoyle, R. H. (ed.), *Statistical strategies for small sample research*, 1-2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reenwood, R., Hinings, C. R., & Whetten, D. (2014). Rethinki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1(7): 1206-1220.
- Greenwood, R., Raynard, M., Kodeih, F., Micelotta, E. R., & Lounsbury, M. (2011). Institutional complexity and organizational responses.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5(1): 317-371.
- Hannan, M. T., & Carroll, G. R. (1992). *Dynamics of organizational populations: Density, legitimation, and competi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Hannan, M. T., & Freeman, J. (1977). The 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929-964.
- Hannan, M. T., & Freeman, J. (1987). The ecology of organizational founding: American labor unions, 1836-1985.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 910-943.
- Hannan, M. T., & Freeman, J. (1988). The ecology of organizational mortality: American labor unions, 1836-1985.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 25-52.
- Haveman, H., & David, R. (2008). Ecologists and institutionalists: Friends or foes?. In R. Greenwood, C. Oliver, R. Suddaby, K. Sahlin (eds.),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573-595,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Hesmondhalgh, D., Nisbett, M., Oakley, K., & Lee, D. (2015). Were New Labour's cultural policies neo-liberal?.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1(1): 97-114.
- Heugens, P. P., & Lander, M. W. (2009). Structure! Agency! (and other quarrels): A meta-analysis of institutional theories of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1): 61-85.
- Hillman-Chartrand, H. H., & McCaughey, C. (1989). The arm's length principle and the ar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past, present, and future. In Cummings, M. C., Jr., & Schuster, J. M. D. (eds.), *Who's to pay for the arts?: The international search for*

- models of arts support*, 43-80, New York, NY: Americans for the Arts.
- Honaker, J., & King, G. (2010). What to do about missing values in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2): 561-581.
- Howard, W. J., Rhemtulla, M., & Little, T. D. (2015). Using principal components as auxiliary variables in missing data estim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3): 285-299.
- King, G., Honaker, J., Joseph, A., & Scheve, K. (2001). Analyzing incomplete political science data: An alternative algorithm for multiple impu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49-69.
- Kuilman, J. G., & Li, J. (2009). Grades of membership and legitimacy spillovers: Foreign banks in Shanghai, 1847-1935.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2): 229-245.
- Lander, M. W., & Heugens, P. P. (2017). Better together: Using meta-analysis to explore complementarities between ecological and institutional theories of organization. *Organization Studies*, 38(11): 1573-1601.
- Long, J. S., & Freese, J. (2006).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s using Stata (Vol. 7)*.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 Meyer, J. W., &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 Mezias, S. J., & Boyle, E. (2005). Blind trust: Market control, legal environments, and the dynamics of competitive intensity in the early American film industry, 1893-1920.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0(1): 1-34.
- Mohr, L. B. (1969). Determinants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1): 111-126.
- Newman, D. A. (2003). Longitudinal modeling with randomly and systematically missing data: A simulation of ad hoc, maximum likelihood, and multiple imputation techniqu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6(3): 328-362.
- Nyssens, M. (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Oxon, UK: Routledge.
- Rao, P. (2002). Greening the supply chain: A new initiative in South East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22(6): 632-655.
- Rowan, B. (2010).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at Stanford: Reflections on the founding of a 30-year theoretical research program. In Schoonhoven, C. B. & Dobbin, F. (eds.), *Stanford's organization theory renaissance, 1970-2000 (Vol. 28)*, 3-19. Bingley, UK: Emerald Group Publishing.
- Ruef, M. (2000). The emergence of organizational forms: A community ecology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3): 658-714.
- Sorenson, O., & Audia, P. G. (2000). The social structure of entrepreneurial activity: Geographic concentration of footwear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1940-1989.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2): 424-462.
- Thornton, P. H., & Ocasio, W. C. (2008). Institutional logics. In R. Greenwood, C. Oliver, K. Sahlin, & R. Suddaby (eds.),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99-129.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Wholey, D. R., & Brittain, J. W. (1986). Organizational ecology: Findings and implic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13-533.
- Winkelmann, R. (2003). *Econometric analysis of count data*. Heidelberg, Germany: Springer-Verlag.
- Wooldridge, J. M.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MA: MIT Press.
- Wooten, M., & Hoffman, A. J. (2008). Organizational fields: Past, present and future. In R. Greenwood, C. Oliver, K. Sahlin, & R. Suddaby (eds.),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130-147.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Zucker, L. G. (1977). The role of institutionalization in cultural persist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5): 726-743.

임선미(林善美):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제목: Changes in artists' multiple job holding since the artist welfare act of Korea: Government standard contracts and COVID-19 funds)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문화정책, 지방정부,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mlim1123@yonsei.ac.kr)

박나라(朴나라):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제목: The Nature of Japanese Governance: Seikai-Tensin (政界轉身)'s Political Success in Postwar Japan, 1947-2014)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가치론, 비교정치행정, 사회정책(문화예술 및 복지 분야),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narapark@yonsei.ac.kr)

Abstract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Insights from Organizational Ec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Lim, Seonmee

Park, Nara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growth of private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s. Drawing on organizational ecology, it assess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arts ecosystem and explores whether institution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positively affects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dedicated to arts designated unde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s theorized by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Using data on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operating across local governments from 2001 to 2021, the study employ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esence of established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enhances the legitimacy of new entrants, suggesting that the field has transitioned from a phase of legitimation to one of competition. Moreover, while the availability of local cultural infrastructur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ergence of new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the enactment of relevant ordinances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new organizational entries.

Key Words: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non-profit organization, organizational ecology,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